

NEWS LETTER

2026-02-27

Legal Issue

-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손해배상: '무조건적 배상'은 없다
-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법적 과제: 혁신과 신뢰의 교차점

MINWHO News

- 김경환 변호사, 쿠팡 특허권 침해 소송과 유통사의 책임 범위 관련 인터뷰
- 양진영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감사장 수여

Business CASE

 법무법인 민후



Legal Issue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손해배상: '무조건적 배상'은 없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최근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가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이 사건의 피고는 온라인 지식거래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1년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2021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약 4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원고의 정보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였다.

이에 원고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쟁점은 과연 정보주체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기업은 '손해가 없음'을 증명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우선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피해자를 돋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원고는 유출 사실만 입증하면 일단 청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것이 곧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기업)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된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제3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둘째, 이메일 주소는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유출돼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셋째,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나도록 스팸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피고는 사고 직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 종합하면, 유출 사고는 있었으나 이로 인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법정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강력한 도구임은 재확인하면서도, 이를 '자동 배상' 또는 '징벌적 배상'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손해의 부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유출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및 확산 여부 △추가 법익침해 가능성 △기업의 관리 상황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에까지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암호화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면책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 변리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oalmephaga@minwho.kr



Legal Issue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과 법적 과제: 혁신과 신뢰의 교차점

현수진 변호사

1. 서론: 'AI 전환(AX)' 시대와 법적 신뢰의 토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AI 전환(AX)' 시대로의 진입은 기술 혁신을 넘어 법적·사회적 신뢰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AI 기본법은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국가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이며, 기업에게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의 파고이자 전략적 기회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① AI 기본법의 핵심 체계, ② 주요 조문별 책무와 실무 이슈, ③ EU 등 해외 규제 비교, ④ 사업자 유형별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AI'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AI 기본법의 제도적 체계와 핵심 내용

가.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와 정책 거버넌스

AI 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법 제7조)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 부처 간 조정, 성과관리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법 제6조), 이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나. 산업 진흥 조항과 공공부문 면책

AI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명문화되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R&D 지원, 데이터센터 조성(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등은 기술 생태계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AI 관련 행정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공공부문 면책조항(법 제41조)은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실적 장치로 해석된다.

3. 고영향·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규율

가.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의 정의와 책무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 제4호), 엄격한 책무를 부과한다. 대상 영역에는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금융, 채용·인사평가, 범죄 수사용 생체인식 등 10개 분야가 포함된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 AI 위험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
- 학습데이터 개요 및 결과 도출 기준 공개
- 이용자 보호 절차 마련
-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 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고영향 AI 해당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3조). 이는 추후 분쟁이나 과징금 부과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입증하는 방어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 고성능 인공지능(High-performance AI)의 안전성 관리체계

시행령은 학습 단계에서 누적 연산량이 10^{26} FLOPs 이상인 모델을 고성능 AI로 분류하며(법 제32조), 해당 사업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및 초거대 AI 개발사에 대한 안전성 감독의 기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수명주기 전반의 위험 식별·평가 및 완화 조치
-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구축
-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4. 생성형 인공지능과 투명성 확보

AI 기본법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콘텐츠를 생성하는 AI(생성형 AI)에 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와 정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의무를 명시했다(법 제31조).

-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함.
- 산출물 표시 의무: 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AI 산출물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딥페이크나 허위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언론·미디어·교육 분야에서 실질적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5. 글로벌 규제와의 비교: EU AI법(AIA)과 한국형 모델의 특징

가. 위험 기반 접근의 차이

EU AI법은 위험 4단계 분류 및 사전 적합성 평가(CE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은 원칙 중심의 유연한 규율 체계를 택해, 사후관리 중심의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산업진흥 기조를 반영한 온건한 접근으로서 규제 강도는 낮지만, 위험 관리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개선 과제가 남는다.

나. 법제의 장점과 한계

EU AI법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AI기본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장점: 예측 가능한 정책주기(3년 단위 기본계획), 산업진흥 명문화, 민간 협력 촉진.
- 한계: '중대한 영향' 등 주요 개념의 모호성, 과도한 하위법령 위임, 단순 연산량 기준에 따른 기술 위험 평가의 비과학성.



이를 참고하여, 향후 입법 보완 시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 모델과 AI로 인한 사회적 이익·요소 분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체계화를 모색해야 한다.

6. 사업자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

가. 스타트업: 사전 확인과 'Human-in-the-loop' 설계

내부 법무 역량이 제한된 스타트업은 고영향 AI 해당성 확인 제도(법 제33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AI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도록 인간 개입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과 지역화된 프라이버시 대응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도 일정 요건(전년도 매출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진다(법 제36조). 대리인은 정부의 조사·자료요구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계된 가명정보 처리, 국외 이전 동의, Opt-out 체계 구축 등 현지화된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다. 공통 과제: 개인정보 보호법와의 융합적 컴플라이언스

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가명정보 처리의 동의 면제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을 사전 검토하고, 위탁 관계에서 개인정보 전달이 제3자 제공이 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정교화해야 한다. 특히 맞춤형 광고·쿠키 기반 행태정보 수집 등에서는 명확한 동의 절차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AI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실질적 지표가 될 것이다.

7. 결론: '신뢰받는 AI'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AI 기본법은 시행 초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나, 이는 규제 면제가 아닌 시스템 구축의 골든타임이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정부는 유연한 집행과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해 시장을 확장시켰듯, 투명하고 안전한 AI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이자 글로벌 신뢰의 핵심이 될 것이다. AI 기본법이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장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의 제도적 디딤돌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현수진 변호사

[프로필 보기](#)

02-532-3425
hyunsj@minwho.kr



MINWHO NEWS

김경환 대표변호사, 뉴스토마토와 인터뷰 쿠팡 특허권 침해 소송과 유통사의 책임 범위 관련

쿠팡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유통사의 책임 범위 쟁점 제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휴대폰 케이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며, 특히 침해 사안에서 유통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민사 분쟁으로, 플랫폼 기업의 사업 구조와 책임 한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단순히 제3자가 제조한 상품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직접 매입해 판매한 직매입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특허 침해 가능성을 수차례 통지받았음에도 판매가 중단되지 않고 매출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침해 인식 이후의 유통·판매 행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제조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허 침해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침해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지속했다면, 고의에 의한 권리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플랫폼이나 유통사의 역할이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법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 청구항이 발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특허 자체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김경환 변호사는 발명의 핵심을 구성하는 청구항을 중심으로 권리 범위와 침해 여부를 침밀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에도 유사한 휴대폰 케이스 특허 분쟁에서 무권리자 출원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손해배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대형 플랫폼이나 유통사가 관여된 구조라 하더라도 기술의 정당한 권리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김경환 변호사의 전문성과 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INWHO NEWSLETTER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감사장 수여

양진영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감사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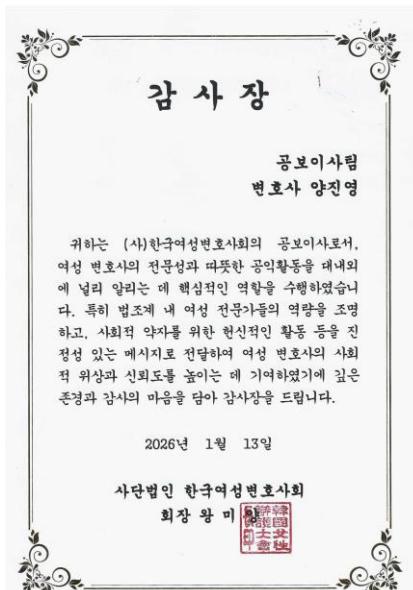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감사장은 여성 변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점, 그리고 공익적 법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천해 온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양진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 여성 전문가들의 역량을 조명하고,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전달함으로써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법률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법무, IT·신기술, 지식재산(IP), 핀테크·금융, 공공기관 자문 등 전문 분야 전반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민후가 지향해 온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민후는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있는 법률 조력, 그리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로펌이 될 것입니다.



Business CASE

이달의 주요 업무사례

1. 직무발명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보상금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2.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3.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 대리해 방어 진행, 각하 심결 도출 승소 (청구인 등록고안과 기능 차이 입증 및 침해 불성립 주장)
4. 경쟁업체의 DB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고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
5.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대리, 도용 인정 및 재사용을 금지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6.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률자문
(고객사 제품이미지 등 무단 사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체 대상)
7. 자사주취득, 주식양도, 주주총회 절차 등 주주 간 지분정리 관련해 스타트업 법률자문
8. 건설사 특허공법 관련 특허 종류, 독점실시권 및 조달청 자료 보완 요구 대응 가능성 검토 등 법률자문
9.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10.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 타워 역삼 11층

Tel. +82-2-532-3483 **Fax.** +82-2-532-3486

www.minwho.kr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주요 업무사례 바로가기]



[전화 상담 바로가기]



[카톡 상담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상담 바로가기]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법무법인 민후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소식 자료로, 모든 법률적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민후에 있으므로, 무단 배포, 복사, 게재를 금합니다.